

Weekly Economy Briefing | 15-1호 | 2015년 7월 30일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 [거시] 2/4분기 국내총생산 1/4분기 대비 0.3% 성장, 작년 동기 대비 2.2% 성장

○ 한국은행, 2/4분기 잠정 실질GDP 성장률 발표(7/23)

○ 주요 내용

		금년 1/4분기 대비 성장률	작년 2/4분기 대비 성장률
국내총생산(GDP)		0.3 %	2.2 %
지출항목별	민 간 소 비	-0.3 %	1.6 %
	정 부 소 비	0.7 %	3.3 %
	설 비 투 자	0.4 %	4.8 %
	건 설 투 자	1.7 %	1.7 %
	수 출	0.1 %	-0.9 %
	수 입	0.5 %	1.1 %
경제활동별	농 립 어 업	-11.1 %	-3.5 %
	제 조 업	0.8 %	0.4 %
	전기가스수도사업	0.0 %	4.7 %
	건 설 업	0.4 %	0.3 %
	서 비 스 업	0.1 %	3.0 %

- 소비: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 감소로 민간소비는 감소한 반면 정부소비는 증가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는 감소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축 증가로 인해 증가
- 수출: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감소
- 수입: 원유 및 자동차 수입 증가, 국외 소비 증가
- 농림어업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제조업은 휴대폰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
-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감소했으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이 증가

○ 함의 및 전망

- 국내 서비스에 대한 민간소비는 감소했는데 해외에서의 소비는 증가
 - 재화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투자는 줄어든 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증가
 -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동차 수입 또한 증가
 -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감소했는데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은 증가
- 소비도 양극화된 양상(내수 감소, 국외 소비 증가)과 함께 정부지출 및 부동산 경기(주택건설과 부동산·임대업)로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모습

□ [거시] 기준금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8월)시까지 1.50%로 유지

○ 금융통화위원회, 2015년도 제13차(7/9) 금통위 의사록 공개(7/29)

○ 주요 내용

- (잠재성장률)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와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가지수)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부동산시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 주거비 항목이 제외되는 등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조적 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함
- (중국 증시) 중국의 주가 급락은 직접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신용거래 규제조치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때문으로, 향후 중국 정책당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중국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중국 주가 급락은 중국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 (미 연준 정책금리) 그리스 사태, 중국경제 문제, 취약신흥국의 채무불이행위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연준 고위 인사들은 당초 입장을 견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 연준은 그리스 사태에 따른 장기시장금리 하방 압력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물가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LTV, DTI의 적용지역 확대나 한도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총량관리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1)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LTV나 DTI를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수단을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장기금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요인을 보더라도 현재의 기준금리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 국내와 해외의 금리차 축소로 인해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인이 축소된 상태라는 점, 추경용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주택담보대출 2)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를 보면 변동금리는 단기자금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고정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시장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음

- (개인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경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함

○ 합의 및 전망

- 그리스 사태로 유로지역의 회복세가 다소 불안정해지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부진

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 수출, 산업생산, 농업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짐에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행의 1.50%로 유지하였음

-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

→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책으로서의 효과는 현재 많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상황임

□ [지역경제] 주택시장 과열화에 이은 토지시장 과열화

○ 7.28. ‘대구 땅값 올 상반기 1.8% 올라 최고’ (중앙일보) 외 7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전국 지가는 56개월째 오름세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가는 모두 상승하였고 대구와 전남의 상승폭이 특히 높음 (전국평균 1.07%, 지방 1.18%, 수도권 1.01%)
- 토지거래도 작년대비 21.6% 높아져, 2006년 이후 상반기 통계 중 최고 거래량을 기록



(서울경제 7.28 기사일부, 국토교통부 자료)



(서울신문 7.28 기사일부, 국토교통부 자료)

○ 함의 및 전망

- 최근 보이는 지가 상승과 토지거래량 증가 현상은 지역의 개발 호재들로 인한 부동산의 매수세 상승 때문이나, 최근과 같은 열기가 가라앉는다면 경제적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예상되므로 현 시장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 있음

□ [지역경제]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화에 대한 우려

○ 7.28. ‘한여름 달구는 5만가구 분양大戰’ (중앙일보) 외 1개 관련 기사

7.28. ‘수도권서 신규분양 ‘홍수’ 수년 후 집값급락 우려’ (파이낸셜 뉴스)

○ 주요 내용

-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물량은 19만 가구 이상(7-8월 11만 가구 이상, 지난해 대비 약 3배)로 공급되었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만성적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주택 구매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9.4대 1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
- 하반기 분양물량도 26만 이상이며, 향후 주택공급 가늠자인 주택 인·허가도 이보다 많음

○ 함의 및 전망

- 분양시장 호황에 따라 분양물량이 과대하게 공급되고 있어, 이로 인해 향후 시장 변동 시 도시외곽과 비인기지역의 미분양 및 집값하락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조세] 정부 다음 주 초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공평과세 관련 개정안 담을 가능성 낮아

○ 경과

- 2014년은 8월 6일 발표, 2013년은 8월 8일 발표함
- 7월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2회(7/3, 7/9), 한국세법학회 공청회(7/15) 개최

○ 주요 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주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합리화 방안', '기업과 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이었음
- 한국세법학회 공청회 주제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이었음
- 언론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R&D 세액공제 축소,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한시적 비과세, 종교인 과세,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변경 등의 보도가 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밝힘

○ 함의 및 전망

- 우리 당은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 조정을 주장해 왔음
- 정부의 개정안이 전향적 내용을 담을 가능성은 낮음.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비추어 '넓은 세원'과 관련된 개정안을 담을 가능성도 낮음

□ [조세]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 세입 감소

○ 경향신문에서 '2014년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지방세 감면액은 16조759억 원으로 감면율은 23.0%임

- 관련기사: 경향신문(2015.7.29.) '정부의 감세 정책에 거덜나는 지방 재정'

○ 주요 내용

- 지방정부의 과세권한 약화됨.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감면하여 2013년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은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87.2%를 차지함
- 국세 감면도 지방세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부과되기 때문임

○ 함의 및 전망

-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감면, 경기위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보전 방안 검토 필요

□ [산업] TPP 각료회의 개최, 원칙적 합의 선언 가능성

○ 7.28. 하와이에서 TPP 12개국 각료회의 개최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 대만과 한국은 가입 희망

- 관련기사 : 한국경제(2015.7.29.), '글로벌 무역지형 바뀔 12개국 TPP 각료회의 하와이서 개막'

○ 주요 내용

- 협상이 타결될 경우 12개국 협상단은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결과 발표 예상
- 통상전문가들은 원칙적 합의 선언 가능성 전망, 미타결 시 향후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정치 일정 등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협상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크기 때문임

○ 합의 및 전망

- TPP는 관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만큼 체결 시 각국의 정책적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 높음. 하지만 TPP 국가와 비가입국의 교역 규모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TPP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신중했는데, 신중함도 답이 아님. TPP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며 가입/비가입 모든 경우에 우리나라 무역 전망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준비 필요

□ [산업]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원전 2기 추가 건설 발표

○ 7.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함

○ 주요 내용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소비량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9년 656,883GWh로 전망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9년 111,929MW로 전망함
-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2029년에 22%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하여, 총 3,456MW 규모의 신규설비 물량 도출, 원전 2기(총 3,000MW) 신규 건설
- 2017년 가동시한 만료 예정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함

○ 합의 및 전망

- 전력수요관리 방안 부족 평가와 함께 원전2기 추가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있음

□ [산업] 한국 포함 52개국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정보통신제품 수출 확대 가능성 높아짐

○ 7.24.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 타결

- 관련기사: 중앙일보(2015.7.27.) '1,100조 시장 관세 철폐...한국, 반도체·TV 중국 수출 호재'

○ 주요 내용

- 201개 IT 제품의 관세 장벽 단계적 폐지, 52개국 협정 서명, 효력은 WTO 전 회원국
- 발효 후 최대 7년 동안 관세 단계적 폐지, 1조 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IT시장 추가 개방
- 메모리 반도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TV·라디오·카메라·모니터 부품 등 한국기업 경쟁력 보유 제품이 무관세화 품목에 대거 포함됨
-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위 해당 제품 수출은 1,052억 달러, 무역흑자 381억 달러

○ 합의 및 전망

- 한국 정보통신산업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임은 분명함
- 한국·일본·유럽은 물론 중국·미국까지 IT 무관세 경쟁에서 승리 자신하고 있음
- IT 수출 확대 여부는 품질이나 기술 같은 비가격경쟁력에 달려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효과’에만 기대선 안 된다는 분석도 있음